

Infographic 세계를 뒤흔든 ‘가보지 않은 길’

구성 김문관 기자,
조강휘 인턴기자
그래픽 박고은 디자이너

○ 1929~1933

대공황(Great Depression)

배경 및 경제에 끼친 영향

1929년 10월 24일(검은 목요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시작. 1929년 10월 다우



지수(DJIA) 전월 대비 39.4% 감소. 도산 은행 수는 9755개. 명목 GNP는 45.6%, 실질 GNP는 26.5% 감소. 실업률 24.9%까지 급등. 수출 68% 감소. GN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0.8%에서 0.3%로 감소.

대공황 전후 미국 주요 경제지표

구분	대공황 이전 (1923~1929년)	대공황 시기 (1929~1933년)
명목 GNP	7%	-45.6%
실질 GNP	10.6	-26.5
소비자물가	-3.4	-24
수출	8.9	-68
GNP 대비 경상수지	0.8	0.3
실업률	8.7	24.9

자료 : 보험연구원, 미국 인구조사국

정책 대응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재할인율을 인하. 통화 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확대해 국제 대량 매입.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고용 확대와 농업 지원 등을 목표로 재정지출을 확대(전국산업부흥법을 제정해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근로조건 보장 등 시행). 재정적자 축소를 목표로 세입조정. 이것들을 뉴딜정책이라고 통칭.

○ 1982~1989

저축대부조합(S&L) 파산 사태

배경 및 경제에 끼친 영향

미 연준의 단기금리 인상이 저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자금을 운용하던



저축대부조합(S&L)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킴. 파산 기업 수 107개로 급증. S&L은 경영악화 극복을 위해 위험자산 투자 확대. 부동산 가격 급락, 주가 하락.

정책 대응

미 정책 당국은 자금 조달과 여러 정책 공사 설립을 통해 부실 S&L 정리. 1987년 금융공사(FICO)를 설립해 FSLIC에 S&L 정리비용을 조달함. 자산관리회사(RTC)를 설립해 1989년부터 1995년까지 747개의 부실 S&L 정리. 부실 S&L 처리를 위해 4900억달러 소요. 이 중 납세자 부담이 총 소요 비용의 87%인 4260억달러가량 차지.

검은 월요일(블랙먼데이·1987)

1987년 10월 19일(검은 월요일) 뉴욕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주가 대폭락 사건. 이 사태는 홍콩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확산. DJIA 전 거래일 보다 23%가량 하락. 이 밖에도 영국, 캐나다, 홍콩 등이 대폭락을 겪음. 뉴질랜드는 60% 폭락해 회복까지 수년 소요. 이 사건 이후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



○ 1992~2002

일본 장기불황(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배경 및 경제에 끼친 영향

1980년대 후반 자산 가격의 급상승, 저금리로 인한 신용 팽창 등 경제에 거품이 형성.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기준금리 인상,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기업 수익성 악화, 신용경색 발생으로 도산 기업 수 급증 및 금융부실 규모 확대. 1990년대 신탁, 신용금고 등 부실화를 시작으로 은행, 증권, 보험까지 확산.



정책 대응

일본은행(BOJ)은 기준금리 인하, 자금 지원, 은행·증권 직접 대출, 증권 매입 그리고 유동성 공급 등 비전통적 금융정책 병행. 통화당국은 연 6%의 기준금리를 12년간 총 12회에 걸쳐 0.1%까지 인하.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목표로 중장기경제대책과 긴급경제대책을 10회 이상 수립 및 집행.

해외 경제 학자 제언 4명

모리스 옴스펠트

“다행히 한국 정부는 재정정책 여력이 있다. 이를 쓰는 데 망설여서는 안 된다.”

제프리 프랑켈

“경제학자들이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미 세계적 불황에 빠져있다.”

스티븐 해밀턴

“지원 타킷은 타격을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들에게 소득보증을 제공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앤더스 오슬렌드

“각국 지도자의 리더십이 약화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내 전 경제사령탑 제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장관

“한국 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금융권에서 비우량채권과 같은 기업 부채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